

이 대통령, 취임 하자마자 ‘소통행보’...청소노동자·방호직원 격려

취임 첫 일정...“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주주의 지키신 분들” 감사 인사 국회서 우원식 국회의장·여야 대표와 오찬 “국민의 어려움 같이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른 취임 선서를 하며 취임 첫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에 따라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국정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등의 별도 행사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했다.

취임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과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23년 단식 기간 내내 어려움으로 도움을 줬던 당대표실 담당 미화원 등을 만났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은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은 국회 청소 노동자였다”고 설명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지난 2023년 이 대통령의 단식 기간 내내 여러 도움을 줬던 당 대표실 담당 미화원 최성자 님도 만났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국회 사랑재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도, (국민의힘)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법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급속히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적대와 경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따로 당사도 찾아볼까도 했지만, 경호 문제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마치고 청소노동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등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며 “국회의장께서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2분께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인천시 계양구 사저에서 나와 이웃 주민들과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첫 출근 길에 올랐다.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해 더

불어민주당 선대위 지도부와 함께 현충탑에 참배한 뒤 현충원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재판 중 당선 첫 대통령... ‘불소추 특권’ 헌법 84조 해석 주목

명확한 규정 없어...대법원, ‘5개 형사재판’ 사건 정치 유력 민주,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전체회의 통과도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담은 헌법 84조의 해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원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들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다.

당장 가장 큰 문제는 18일 진행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다. 지난달 1일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재판이 진행되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취임으로 헌법학계에서는 다시 헌법 84조를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소추라는 것이 재판에 넘기는 기소만 해당하고 이

미 진행중인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이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

반면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면 이 대통령의 재판은 정지될 수 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법조항의 문언적 해석만을 놓고 보면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84조의 법제정 취지를 근거로 내세워 소추에 재판이 포함돼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84조의 당사자는 대통령으로 국한돼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에는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의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내란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로 인해 대통령을 법정에 서게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해치고 국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정취지 이외에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법안들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있지만, 특

혜란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려는 취지로 허위사실공포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헌법학자들은 해석이 분분할 경우 결국 국회의 입법에 의한 구체적 법안 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통의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정치적으로 “왜 하필 현직 대통령부터 적용하는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까지 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 가능성이 크다.

헌법학자들은 결국 파기환송 재판부가 대법원에게 다시 사건을 넘기는 일명 ‘핑퐁’ 형태가 진행되고 대법원이 사건을 정지시키는 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용산 대통령실에 아무것도 없어...무덤 같다”

청와대 복귀 전까지 집무공간 사용 세종 이전 집권 후반기 구체화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사무용품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당분간 집무공간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면서 정비를 마친 청와대로 이전할 계획이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은 집권 후반기 구체화 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하며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면서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 황당무계하다”면서 “그래도 다행히 준비된 게 있어서 인선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인선 브리핑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다른 인선 관련) 기존의 대통령 시스템을 활용하고 조직 체계를 바꾸려면 고려할 게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면서 “원래 서명해서 결제를 해야하는데 결제 시스템이 없다. 완전 새롭게 해야될 상황이다.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어야 할

지, 인장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직업 공무원들을 복귀시킨 모양인데 곧바로 원대복귀를 명령해 전원 제자리로 복귀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을 임시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사용한 뒤 청와대로 이전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공식 이전한 지 3년여 만에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안시설 정비 등에 최소 6개월여가 소요되는 점 때문에 당분간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대통령실이 될 전망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용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